

첫 직장이 향후 10년 결정

청년실업 문제, 청년노동시장 구조적 특성이 원인

살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첫 직장이 향후 10년 이상 영향을 미쳐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는 22.7%에 달했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 다섯 중에 하나가 실질적 실업 상태지만, 정부 대책은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집중했다. 실제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1 차례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실업률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고용대책은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질보다 취업자 수 위주로 평가되면서, 청년들을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만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 낮은 고용유지율, 사업체의 반복 참여 등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 사업이 근본적인 청년 고용대책이 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청년고용시장은 청년들의 실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 첫 직장의 임금은 10년 이상 임금과 고용 등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졸 청년으로 국한하면, 임금 뿐 아니라 첫 직장의 규모와 안정성 여부도 1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면서까지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며 "대부분 청년들이 생애 전반에 미치는 첫 일자리 특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첫 일자리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길어진 취업준비 기간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대졸 청년의 미취업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수록 경력 손실이 발생해 임금이 낮아지고, 같은 경력과 비

교해서도 시간이 지날 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첫 직장이 생애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해소해야 청년실업 문제의 살마리가 보인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한 연구위원은 "경력 초기의 불운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차원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성과가 가시화 되려 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경력초기 일자리 특성에 따른 생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부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년고용대책은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청년층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조언도 덧붙였다.

/뉴스시스



VR로 박진감 넘치는 게임 하세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브라이트(VRIGHT) 신촌점에서 모델들이 VR 콘텐츠를 체험을 하고 있다. 브라이트(VRIGHT)는 가상현실을 주제로 한 신개념 도심형 테마파크로 스페셜포스 VR, 비행 슈팅 어드벤처 등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조업 창업기업 대상, 12개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2017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일몰기간 이후(2017년 8월 2일)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제조업 창업기업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차년 한해 도내 102개 기업이 263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며, "동 제도개선으로 전북지역의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증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연계 보조금 직접지원 검토"

"美보호무역 대응 현 단계선 '아웃리치' 우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 직접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사업주가 아닌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mismatch과 창업(육성)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국제 폭 저출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새로운 서

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양상인 점도 감안해 다각적인 정책 조합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 지원이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바로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잘 집행하되 추경이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지원에 대한 포퓰리즘 지적에는 "청년 일자리나 특정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폭탄'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협상을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물밀 접촉을 통해 관세 폭탄 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엔 성급하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소위 '아웃리치(우호 세력 접촉)'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중국어 유력언론(매)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는 "이론적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신호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잘 추진했으니 차분히 봐달라"고 했다.

한국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국GM과 산업은행 측이

재무 실사의 범위와 시기를 조율중"이라며 "어마도 좋은 선에서 합의를 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사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 문제는 이달중 구성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정 지역 집값에 정부가 몰두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세 문제도 강남과 서초 지역만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보유세와의 조세 정책적 조화,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